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노순동 / 시사저널 기자

얼마 전 열린 법무부가 주관한 민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때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호주제 유지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발제를 하던 반대편 법학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단상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단의 주인공은 줄곧 친양자 제도 도입, 호주제 폐지 등을 주장해온 부산대 김삼용 교수였다.

문제가 된 김교수의 발언 내용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자신의 성분을 갖지 못한 이른바 비성층(非姓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대목이었다. 역사학자들이 사료를 통해 이미 확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을 뿐인데 반항은 엄청났다. 방청석에서 '그럼 당신 애비도 노예였느냐' 운운하는 욕설이 터져나온 것이다.

주위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김 교수의 부친 또한 법학자이고, 게다가 친족법의 권위자라고 했다. 또 1960년대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한다. 그런 맥락을 알기에 부친까지 싸잡아 욕을 한 것이었을까?

익아한 것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 분들이 평소 전통과 예의범절을 강조해온 분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토론을 하다보면 상대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편다는 느낌이 들 때 감정적으로 격분할 수는 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를 폐지하지는 이들

이 도대체 사람이냐'고 고함을 쳤다. 또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 판결 등 일련의 결정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 호주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하는 응답자 비율이 꽤 높다. 하지만 논의 내용은 여지껏 제자리걸음이다. 마당이 펼쳐질 때마다 성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통에 변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에게 호주제 논의는 제대로 다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지겨워져 버렸다.

현재의 민법 개정안은 많은 논점이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움직여야 할 이들은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이래저래 유력 문중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소신파 의원조차 '지역구를 관리해야하니 나를 호주제 폐지의 대표 선수로 내세우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다.

대신 김 교수처럼 전면에 나선 이들은 대표로 못매를 맞는다. 잦은 매에 단련된 그이지만 이번에는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그는 글 말미에 이렇게 썼다. '호주제가 정통 가족 제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PPFK